

5·18 손배 위자료 형평성 논란...서울, 광주보다 최대 4배

배상액 산정은 재판부 재량...소송 제기 지역 법원에 따라 2~4배 차이 비슷한 피해에도 금액 차이 커...광주법원 위자료 기준 상향 필요 목소리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와 관련, 서울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이 광주법원보다 최대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유사사건인데도 피해자나 유족이 소를 제기한 법원에 따라 금액 편차가 심해 형평성 논란을 부르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가 인정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을 잇따라 인용했다.

민사재판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은 재판부의 재량이다. 피해자측의 사정을 고려하고, 가

해자 측의 과실·고의 정도, 동기와 원인 등을 참작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다.

관련 판결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법조계에서는 보통 대법원에서는 손해배상 인정 여부만을 판단하고 위자료의 액수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서울중앙지법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광주지법과는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광주지법에서 243일 구금을 당하고 장해등급 9급을 인정한 피해자는 9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지만, 서울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1억 809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순장해 10급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광주지법에서는 24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지만, 서울법원의 기준으로 하면 90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4배 차이가 난다.

결국 어느 지역 법원에 소를 제기했느냐의 사정에 따라 2~4배의 위자료 금액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광주법원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판결문에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포괄적 기준은 정해져 있다.

광주법원도 당초 재판부별로 위자료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사부가 모여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략적인 기준은 1980년 당시 사망자는 2억원, 행방불명자는 1억 8000만원, 장해등급 14급은 500만~600만원, 10급 2400만원, 7급 4500만~5400만원, 5급 8000만원 수준이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민사부는 판결문에 5·18민주화운동의 위자료 액수 산정의 구체적인 기

준을 제시했다. 서울재판부는 사망자의 대해서는 4억원을 위자료 기준으로 잡았다.

연행·구금·수형의 관해 수급일수 1일당 30만원을 위자료를 산정하고, 장애가 있는 경우 14등급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함에 따라 1500만원씩을 더하는 방식이다.

노동능력 상실 100% 장해등급인 1~3등의 경우에는 3억 1500만원이 산정된다. 장애가 남지 않는 부상자의 경우 500만원의 위자료를 기준으로 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광주지법의 기준이 서울보다 낮은 이유로는 광주법원이 광주지역 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위자료를 인정해 왔다는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18보상법에 따라 일부 금액을 보상 받은 것도 감안하고 국가에산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정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국가법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서울과

광주지역의 인식차이라는 의견을 내놓는 법조인도 있다.

하지만 국가법외에 의한 피해를 광주법원에서 너무 인색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재혁 5·18민주화운동 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광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서울과 광주의 물가에 따른 차이가 위자료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하나"고 불만을 표했다.

지역 변호사들도 "변호사의 변호능력이나 법리적 차이가 아닌 단순 소송제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기준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최근 국가 과실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액수 등을 고려하면 서울재판부의 위자료 산정기준이 적절한만큼 광주법원도 위자료 산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 구속

오토바이 추돌해 사망사고...서부경찰, 도주 도운 고교 동창도

광주 고급 외제차(마세라티)로 오토바이를 추돌해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범이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28일 오토바이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A(3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도주를 도운 고등학교 동창 B(32)씨는 범인도피에니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4일 새벽 3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갯등육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2차 술자리를 가겠다고 운전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서울에서 A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하반신에 중상을 입었으며, 동승하던 20대 여성은 숨졌다.

A씨는 사고 직전 광주시 서구 삼우지구 일대에서 지인 C(31)씨, D(32)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2차로 술을 마시려고 마세라티 차량을 몰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낸 직후 차량을 버리고 C씨의 벤츠 차량을 타고 D씨와 함께 대적으로 도주했다.

A씨는 C씨를 통해 해외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가 취소했으며, 이후 서울로 이동해 B씨를 만나 대포폰을 전달받아 도피 생활을 했다.

서울 일대를 배회하던 A씨는 결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도주를 도운 C, D씨 또한 범인인도피 등의 혐의로 일제히 조사를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알았지만, 술을 마신 데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무서워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직업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태국에서 주로 거주하다 최근 귀국해 지난 23일 광주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범인차량으로, 차주는 현재 태국으로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친구로부터 하루 동안 차량을 빌려 뺏겼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또한 음주 채증공식 등을 이용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고 혐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애인생활체육 화합 한마당 광주 장애인생활체육 대축전이 27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개막했다. 5개구 장애인체육회 소속 회원들이 함께 화합을 위한 단체경기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법원 "반려동물 화장시설 불허한 광산구 행정처분 위법"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불허한 광주시 광산구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업체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애완동물 장묘업을 운영하는 A업체는 지난 2022년 5월 광주시 광산구 동물장제시설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업체는 시설을 화장장이 포함된 묘지관리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냈지만, 광산구는 주민거주지 인근, 먼지발생량 초과 등을 이유로 불허결정을 내렸다.

이에 A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등을 통해 광산구의 불허 이유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주변 인가가 7가구에 불과해 밀집지역이 아니고 다른 마을은 300m 이상 떨어져 있는 점, 먼지발생량이 기준치 이하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인의로 동물사체를 땅에 매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이나 주변경관 훼손 등의 우려를 고려하면 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순천 '묻지마 살해범' 오늘 신상정보공개위 개최

"소주 4병 마셔 기억 안나...피해자와 모르는 사이" 진술

순천도심에서 '묻지마 범행'으로 귀가 중인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개최된다.

전남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A(30)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30일 개최한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지방경찰청 소속 심의위원회로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 나이, 이름 등 신상 공개를 결정한다.

김길태, 정유정 등의 흉악범죄의 경우 신상이 공개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범의 경우 공개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 40분께 순천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친구를 배웅하고 귀가하던 B(17)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광주

지법원 순천지원은 주거불명파 도주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애초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며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당시 소주 4병 정도를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도 A씨와 B양이 일면식이 없던 사이라는 점을 토대로 '묻지마 범행'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한편 순천시가 사건 현장에 마련한 분향소에는 B씨를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